

제주4·3의 역사적 조명

양 조 훈*

요 약

1948, 한반도의 남쪽 섬 제주도에에는 광란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제주도 주민들은 미군정이 실시한 남한 단독선거를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영구히 분단시키는 선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3만명에 이르는 참혹한 희생을 치렀다. 당시 섬주민이 27만명이므로 전체 인구 9명중 1명이 학살된 것이다.

이 원고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하는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비인간적 범죄인 초토화작전이 전개된 과정, 미국의 책임문제 그리고 50년동안 이 사건이 한국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묵살되어온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I. 냉전 희생의 섬 제주도

1948년 한반도의 남쪽 섬 제주도에에는 광란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 희생자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¹⁾이 있지만, ‘3만명 안팎’이란 주장이 설

* 제민일보 상무이사·前 편집국장

- 1) 김봉현, 『濟州島 血의 歷史』(1977·大阪), 80,065명
고담룡 국회의원, 『濟州新報』, 1960. 5. 31. 65,000~68,000명
김성숙 국회의원, 1960년 민주당정권 시절 국회 보고, 5만명
박용후, 『제주도지』(1976), 4만명
존 메릴, 『제주도반란』(1975), 3만명 이상

득력이 있다. 당시 섬주민을 27만명으로 봤을 때 전체인구 9명 중 1명이 희생된 것이다. 제주도 주민들은 미군정이 실시한 남한 단독선거를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영구히 분단시키는 선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가 참혹한 희생을 치른 것이다.

희생자 숫자도 엄청나지만 이 수치 만을 보고 피해정도를 모두 표현할 수는 없다. 수치로 집계될 수 없는 것들, 가령 돌이킬수 없는 고통을 간직한 채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4·3피해자와 유족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해온 이 나라, 이 사회의 부도덕한 윤리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

'4·3'은 단순히 제주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대사건이다.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다면, 그 버금가는 참극이 바로 제주 4·3이다. 미군정 시절인 1948년의 제주도는 전쟁 지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권력에 의해 전쟁 상황을 뛰어넘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사망자 가운데 '90% 가까이'가 군인과 경찰 등 토벌대의 총칼에 희생됐다.

전쟁 중에도 군법이 있다. 적군과의 교전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전투를 계속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된다. 포로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국제 규약이 있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기본 철칙이다. 그러나 1948년 제주도에서는 이 기본 철칙이 완전히 상실됐다. 법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수히 법을 어겼다. 인륜마저 저버렸다. 무차별 학살로 갓난아기부터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들까지 처참하게 희생됐다.

해변마을인 조천면 북촌리는 이틀새 군인들에 의해 주민 4백여 명이 희생

양조훈, 『제주도지』 (1993), 3만명 안팎

『서울신문』, 1949. 10. 14. 29,702명

부만근, 『광복제주 30년』 (1975), 사망 27,719명 중상 1,080명 경상 792명 행방불명 32명

- 2) 제주도의회는 4·3 피해자 조사를 벌여 14,504명(피해신고자 11,665명, 미신고명단 2,839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 중 피해신고자의 가해자별 분석을 한 결과 토벌대 83%, 무장대 11%, 기타 분류불능 6%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4·3피해조사보고서』 (1997)). 그러나 아직도 피해의식에 젖어 희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유족들 가운데는 토벌대에 의한 피해 가족들이 많다.

됐다. 사건은 1949년 1월 17일 일어났다. 이날 일부 병력이 이동 중에 북촌 마을 근처에서 게릴라들의 기습을 받아 군인 두명이 숨졌다. 이에 흥분한 군인들은 게릴라와 대통했다면서 마을의 모든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군인들은 주민 몇 십명씩을 한 묶음으로 끌고나가 인근 밭에서 집단사살했다. 그 속에는 젓먹이들도 있었다. 이때부터 자행된 학살극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돼 남녀노소 약 300명이 숨졌고, 다음날 또 다시 1백명이 학살됐다.

미군이 베트남전쟁 때 한 마을을 덮쳐 주민을 학살했던 '미라이 학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유형의 양민 집단학살은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12월 14일 밤 표선면 토산리에 들이닥친 토벌대는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를 연행한 뒤 죄의 유무도 묻지 않고 모조리 총살했다. 또 얼굴이 고운 젊은 여자들만 따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역시 학살했다. 그 때 희생된 사람이 157명에 이른다.³⁾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왜 그들이 것처럼 허망하게 죽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사망 이유라도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기관은 아무도 없다.

토벌대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며 그 부모·형제를 대신 학살했다. 당시 이를 '대살(代殺)'이라고 불렀다. 1948년 12월 22일 토벌대는 표선면 가시리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호적을 일일이 대조한 뒤 가족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입산한 게 분명하다'며 부모와 형제 76명을 총살했다.⁴⁾

실제의 피해보다 훨씬 축소된 제주도의회 신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마을별 사망자 숫자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봉개리 591명, 아라리 569명, 노형리 560명, 가시리 511명, 북촌리 479명, 삼양리 453명... 이런 마을별 사망자 숫자는 끝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수만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이 참극이 반세기 가까이 금기시

3)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⑤, 전예원, 1998, 102~106쪽.

4)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97~100쪽.

돼 왔다. 과거 정권들은 4·3의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언급도 없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문제로만 덧칠하는데 급급했다. 즉 '4·3은 공산폭동이니 논의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전개가 그것이다. 더욱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작하는 작업까지 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국가폭력사건인 제주4·3은 50년동안 한국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채, '없었던 역사'로 덮여져 왔던 것이다.

II. 4·3의 역사적 배경

제주4·3은 한마디로 미군정 아래에서 한민족이 안고 있는 집약적 모순이 빚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되는 냉전상황과 한반도를 38선 남북으로 갈라놓은 미국의 실책, 그리고 제주도의 저항역사와 당시의 독특했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4·3의 도화선은 1947년 3월 1일 제주읍내에서 3·1절 시위 군중에게 응원 경찰이 발포, 6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군정당국은 좌의계의 선동에 의해 시위 군중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잉 반응에 의한 무차별 발사라는 것이 일반 대중의 인식이었다. 6명의 사망자 신원⁵⁾이 국민 학생, 찻먹이를 안은 아낙네, 장년의 농부 등 대부분 관람 군중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주도민들을 격분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잠시 4·3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뜻에서 해방정국의 제주 상황을 살펴 보겠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했

5) 사망자는 許斗鎔(15·제주북교 5년) 朴才玉(여인(21) 吳文壽(34) 金泰珍(38) 梁成鳳(49) 宋德洙(49)이다.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 전예원, 1994, 276쪽.

다.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군에 의해 오키나와까지 점령당하게 되자 제주도를 일본 본토사수를 위한 '對美결전의 최후 보루'로 삼고 관동군을 비롯한 일본 정예군 7만명을 이동 배치했다. 저들의 작전계획에 의하면 미군이 제주에 상륙하게 되면 7만 대군이 최후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이며 옥쇄한다는 것이었다. 또 당시 20만명의 제주도민을 산중으로 끌고가 최후 결전의 소모품으로 사용하겠다는 어머어마한 계획도 있었다.⁶⁾

당시 일본군 정보팀의 분석자료는 미군의 제주 상륙시기는 9~10월, 상륙 병력은 2~5개 사단으로 예측했다. 2차대전이 한달만 더 끝어도 제주섬은 강대국의 전쟁터로, 그야말로 불바다로 변할 뻔했었다. 그런 위기속에서 해방이 되었기에 제주도민의 감회는 본토민들과는 남다른 것이었다.

해방이 되자 제주도에는 귀환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일제는 조선 전체에서 저급한 노동인력을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동력시장'으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제주~대판간 직항로를 개설, 君代丸 등 여러 척의 정기여객선을 운항시켰다. 전쟁기간에도 제주의 젊은이들이 공장 노동자나 전쟁 노무자로 일본에 보내졌다. 그들이 45년~46년 사이에 귀환한 것인데 그 숫자는 자그마치 6만명에 이르렀다. 인구변동을 25%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농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전형적인 노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저임금과 민족 차별에 고통을 받았던 자들로서 일정하게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 가족가운데는 일본에서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을 받았던 자들도 많았다.

그들이 고향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국준비를 위한 자치활동과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는 교육활동이었다. 자치활동은 건국준비위원회에 이은 인민위원회 활동으로 표출됐다. 당시 제주도인민위원회는 막강했다. 그것은 미군정 관리나 미국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⁷⁾ 여러 자료들을

6)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에서의 戰爭準備」(1946), 「朝鮮軍概要史」(1989·東京), 188~190쪽.

林鍾國, 『日本軍의 朝鮮侵略史』②, 1989, 140쪽.

7)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이 섬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당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정부

종합해 보면 제주도인민위원회의 특징은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자치기구였다는 점 ② 항일 경험자들이 주도했다는 점 ③ 온건했다는 점 ④ 존속기간이 전국적으로 가장 길었다는 점 ⑤ 현지 미군정 중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⑥ 중앙이나 전남위원회 조직과도 일정한 거리를 뒀 독자적이었다는 점⁸⁾ 등이다.

당시 뜨거웠던 제주도 교육열기는 '45년 8월부터 47년 12월 사이에 중등학교 10개소, 초등학교 44개소가 설립되었다'⁹⁾는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 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47년 2월 시점에서 전국 각 도에서 뽑은 15개 군을 비교대상으로 15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졸업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이 35.7%로 교육수준 1위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¹⁰⁾

그러나 해방으로 부풀었던 기대감은 얼마 없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군정당국에 대한 불만도 서서히 확산됐다. 6만명에 이르는 귀환 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에 의한 300여명의 희생, 대홍년과 미곡정책의 실패 등 악재가 겹쳤다. 특히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변신, 밀수품 단속을 방자한 군정관리들의 모리행위(1947년 2월 이 문제로 감찰청장이 해임된 사건도 있었음) 등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터진 '3·1절 발포사건'은 제주도민들을 흥분케 한 것이다. 그러나 군정당국은 이 경솔한 발포사건을 정당방위로 주장, 민심 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행세를 한 유일한 조직체였다”(E. 그랜트 미드, 『주한미군정』, 1961, 185쪽).

“제주도인민위원회는 초기부터 강한 독자지지를 밝혀 나갔다. 전남위원회에 종속되는 것을 싫어했다. 미군정 중대는 이 섬을 관할하는데 인민위원회를 이용했으며, 상당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존 매릴, 『제주도반란』, 151~152쪽).

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 77~78쪽.

9)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1979, 30~31쪽.

10) 이 조사에 의하면 북제주(35.7%) 창원(26.7%) 강릉(26.7%) 울산(23.6%) 공주(22.8%) 안동(21.7%) 황성(12.1%)순으로 나타났다(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下』, 202~203쪽). 이 자료는 기존 자료에 간혹 언급되는 “당시 제주도민들은 무지몽매해서....”라는 표현의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발생 열흘 뒤인 3월 10일부터 제주에서는 세계사에서 드문 민관(民官)합동 대규모 총파업이 전개됐다. 이 파업은 발포 경관의 처벌, 경찰 수뇌부의 인책 사임, 희생자 유족 보상 등을 요구했다. 파업에는 도청을 비롯한 도내 156개 관공서 국영기업 단체들이 참여했다.¹¹⁾ 도내 전체 초·중등학교가 항의 휴교를 했고 상점들도 이에 동참해 문을 닫았다. 제주 출신 경찰관 66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가 파면 당한 일도 있었다.¹²⁾ 당시 지방신문은 발포 정당화에 항의하는 희생자 조의금 모금운동을 전개, 제주도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어냈다. 동요하는 민심의 흐름을 틈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조직적인 반경(反警)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군 정보팀이 “총파업에는 경찰 발포사건에 항의, 좌·우익 공히 참가하고 있다”¹³⁾고 보고할 정도로 범도민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군정도 이를 중시, 서울사령부의 카스틱어 명령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했다. 미군 조사단은 제주 총파업의 원인을 3·1절의 경찰발포로 인하여 도민의 감정이 고조됐고 이런 도민 감정을 남로당에서 선동, 증폭시켰다는 두가지로 요약했다.¹⁴⁾ 그러면서도 사태해결의 후속조치로는 ‘경찰의 무차별 발포행위’보다는 ‘남로당의 선동’부분에 비중을 두어 강공정책을 추진해 갔다.

미군 조사단이 제주를 떠난 다음 날부터 조병옥 경무부장과 응원경찰대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제주에 내려왔다. 또한 타도 수사요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대도 설치되었다. 이 무렵 경무부 수뇌부에 의해서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는 발언들이 공공연히 중앙언론에 보도되었다.

3월 15일부터 파업주모자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졌다. 미군정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3월에만 본토에서 응원경찰 421명¹⁵⁾과 서북청년단원들이 대거 들어왔다. 도지사가 극우파인 외지 사람으로 교체됐다. 제주 출신 경찰관들도 뒷전으로 밀렸다. 본토에서 파견

11) 『獨立新報』, 1947. 4. 5.

12) 『서울신문』, 1947. 4. 2.

13) 미 24군단, 『G-2 주간보고서』, 1947. 3. 20.

14) 미 24군단, 『G-2 일일보고서』, 1947. 3. 15.

15) 『獨立新聞』, 1947. 4. 5.

된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들은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 투옥, 고문했다. 심지어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 금품을 갈취하는 백색테러가 잇따랐다.

검속 한달 만에 500여명이 체포됐다.¹⁶⁾ 이런 긴장 상황은 계속되었다. 4·3 발발 직전까지 1년간 2,500명이 구금되었다.¹⁷⁾ 특히 1948년 3월에 들어서면서 조천지서와 모슬포지서 등지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¹⁸⁾이 발생, 사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터질 것 같은 팽창된 위기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과거 탐라국이란 독립국가의 역사경험이 있는 제주도민들에게는 중앙정부에 대한 유다른 저항의 기질이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대해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견딜 때는 용수철처럼 튕겨 나가는 사건들이 있었다. 조선 말기에는 이재수의 난을 비롯하여 도합 여섯 차례의 농민봉기가 잇따라 발생했다. 거기에는 제주도 내부의 계급적·집단적 갈등의 표출이라기보다는 탐관오리의 착취나 중앙정부의 억압에 대한 도민적인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¹⁹⁾

일제 하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항주의적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다. 1908년 의병투쟁을 시작으로 3·1절 만세운동, ‘반역자 구락부’ 결성, 사회주의 해방운동단체인 ‘신인회’ 결성, 제주농업학교 항쟁사건, 제주청맹사건, 그리고 ‘혁우동맹’과 제주도 야체이카(비밀결사) 결성을 거쳐 1932년 그 유명한 해녀항쟁이 일어난다.²⁰⁾

1948년에 이르러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개입한 가운데 통일국가로 가느냐, 분단국가로 가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인 ‘5·10선거’ 강행을 결정했다. 이 문제로 전국의 정

16) 『濟州新報』, 1947. 4. 12.

17) 『新天地』, 제3권 7호, 1948년 8월호.

18) 조천지서에서 金用哲(21·조천중학원 2년), 모슬포지서에서 梁銀河(27·대정면 영락리), 서청 한림경찰대에 의해 朴行九(22·한림면 금릉리)가 각각 고문치사되었다.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 556~577쪽.

19) 金奉玉, 『제주통사』, 1987, 178~196쪽.

20) 金奉鉉, 『濟州島 歷史誌』, 1960, 323~343쪽.

치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 좌파 조직만이 아니라 김구, 김규식 등 우파 및 중도파 지도자들도 단독선거 반대 대열에 나섰다.

미군정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제주도민 사회는 저항의 심지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당시 분단을 반대하는 민족적 염원에 부응하는 분위기도 우세했다. 특히 미군정으로부터 철저한 탄압대상이 됐던 좌파계열의 남로당 제주도 조직은 이 반대운동에 앞장서서 주민들을 선동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 1948년 4월 3일 새벽 탄압에 저항하고, 통일국가 건립을 가로막는 5·10 단선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Ⅲ. 반문명적 범적인 초토화작전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500명 안팎의 소위 무장자위대가 11개 지서와 서청, 대청 등 우익단체의 요인 집을 습격하면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²¹⁾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무장대는 단선·단정 저지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서청의 추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정은 사태 초기에 이 사건을 ‘치안 상황’으로 간주, 4월 5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김정호 경무부 공안국장)를 설치하는 한편, 본토 경찰 1,700명의 제주 파병을 승인하였다. 또한 서청 단원 500명을 증파했다. 그런데 응원경찰 등에 의한 토벌작전은 오히려 민심을 자극, 많은 도민들을 산 속으로 피신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미군정은 4월 17일, 그동안 관망 상태에 있던 모슬포 주둔 경비대 제9연대에도 진압작전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9연대는 이 사건을 제주도

21) 4·3발발 당시 무장대의 무기는 소총이 30정에 불과했고 주로 일본도, 죽창, 몽둥이 등이었다. 당시 성산포지서 순경이었던 金陽洙씨의 증언에 의하면, 4월 3일 성산포지서를 포위했던 40명 가량의 무장대의 총기는 일제 99식 총 1정, 공기총 1정 뿐이고 나머지는 갈고리, 죽창,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1994, 96쪽 참조).

민들과 경찰 및 서청같은 극우 청년단체 간의 충돌로 여겨 '선선무 후토벌' 원칙을 세우고 무장대와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결과 4월 28일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연대정보참모 이윤락 중위, 그리고 무장대측 군사총책 김달삼 등이 회동, △72시간 안의 전투 중지 △무장 해제와 하산이 이뤄지면 주모자들의 신변 보장 등 세 가지 조건에 합의하는 평화회담을 성사시켰다.²²⁾

그러나 이 협상 직후인 5월 1일 우익청년단의 소행에 의한 '오라리 방화 사건'의 조작극²³⁾과 '5·3 기습사건'²⁴⁾ 등이 잇따라 발생, 평화협상의 진로에 찬물을 끼얹었다. 5월 5일 군정장관 딘 소장은 제주에서 최고수뇌회의를 주재하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하다 조병옥 경무부장과 충돌한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로써 게릴라 측과의 평화협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5월 6일 김 중령 후임 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이 부임했으며 수원에서 창설된 11연대가 제주에 추가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 총선거 결과 제주도내 3개 선거구 중 북제주 갑·을구 등 2개 선거구가 과반수 미달의 보이콧으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남한지역 내의 유일한 5·10 단선 거부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아울러 이 단독선거를 추진해 온 미군정에게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을 거부한 제주도가 눈 속의 가시처럼 매우 거북한 지역이 되고 말았다.

5·10선거가 저지된 직후 군병력과 함께 응원경찰대도 크게 증강되었다. 미군정은 증강된 병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5월 중순께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브라운 대령(미군 20연대장)을 파견, 제주 현지작전의 최고 지휘관으로 경비대, 해안경비대, 경찰과 미군을 통솔하도록 했다. 브라운 대령은 원인 치유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진압 일변도로 몰고 갔다.²⁵⁾ 그는 어떻게 하든지 사태를 진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사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

22)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143~144쪽.

23)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54~176쪽.

24) 김익렬,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②, 334~335쪽.

25) 『朝鮮日報』, 1948. 6. 3.

趙德松, 『流血의 濟州島』, 『新天地』, 1948년 7월호.

했다.

신임 박진경 연대장도 그 동안의 경비대의 온건 전략에서 탈피, 대대적인 토벌 위주의 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 진압작전으로 부작용도 속출했다. 당시 군정당국이 발표한 ‘포로가 된 폭도’의 숫자만 봐도 그렇다. 1948년 5월 27일 유동열 통위부장이 발표한 ‘포로’는 3,126명에 이른다.²⁶⁾ 그런데 이 포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6월 10일께에는 6,000명에 이르렀다.²⁷⁾ ‘폭도 아닌 폭도’를 잡아들인 것이다.

5월 21일에는 박 연대장의 토벌정책에 반기를 든 41명의 경비대원들이 모슬포 연대 본부에서 자신들의 무기와 장비 탄약 5,600발을 갖고 탈영, 산 쪽에 가담함으로써 在山 무장대의 무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딴 장군은 박 연대장의 강경 토벌작전을 높이 평가, 6월 초 제주에 직접 내려와 대령 진급 계급장을 달아줬다. 그런데 6월 18일 딴 장군의 신임을 받던 박진경 대령이 그의 숙소에서 부하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 국면을 맞았다. 무장대는 8·25 지하선거 준비,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토벌 수뇌부도 정부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 상태도 잠시 뿐이었다.

1948년 10월에 들어서면서 토벌의 강도가 다시 강화됐다. 남과 북에 서로 적대적인 정부가 출현함에 따라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강한 도전으로 부각되었다. 남한 정권을 장악한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병력을 대거 제주에 파견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제주에 파병하려던 대대가 여수에서 총부리를 돌려 이른바 ‘여순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전국은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군 당국은 10월 20일부터 해군 함정 7척을 동원, 제주와 육지와의 뱃길을 차단했다. 또 제주도 포구의 모든 어선에 대해 출어금지 명령을 내렸다.²⁸⁾

26) 『東亞日報』, 1948. 6. 5.

27) 『朝鮮日報』, 1948. 6. 12.

28) 미 24군단, 『G-2 주간보고서』, 1948. 11. 12.

이로 인하여 제주도는 상당 기간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 여수 14연대 반란사건은 군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숙군 선포를, 제주 사태에 대해서는 참혹한 양민학살의 유혈극을 몰고 왔다.

신임 송요찬 연대장은 10월 17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²⁹⁾ 제주도의 지형상 '해안선에서 5Km 이외의 지점'은 특정한 산악지역이 아니다. 해안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들이 이에 해당된다. 중산간에서는 들판이든 마을 안이든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발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작전이 수립된 것이었다.

이 작전에 앞서 제주읍내 지역 유지들에 대한 일제 검속이 실시되었다. 제주농업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천막수용소에 안 다녀온 유지가 드물 정도로 제주읍내는 일순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법원장이 연행되었고, 현직 검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마저 끌려간 뒤 즉결처분되었다. 제주중학교 교장, 제주신보 편집국장 등이 총살됐고, 제주도정의 2인자인 총무국장이 서청단원에 의해 고문치사되었다. 심지어 토벌대는 당시 유일한 지역언론사인 제주신보를 접수, 서청 단장을 신문사 사장으로 앉혔다.³⁰⁾ 11월 초순께는 9연대 장병 100여명이 군사재판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형됐다. 희생된 군인들은 주로 제주출신이었다.³¹⁾ 토벌대는 초도화작전을 집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철저히 제거했다.

설촌 7백년의 유서가 깊은 중산간 마을 조천면 교래리는 48년 11월 13일 새벽에 초도화되어 하룻밤새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 마을에 들어온 군인들은 무차별 학살극을 자행했다. 시신들 대부분은 총에 맞은채 불에 탔고, 열네살 난 한 소녀의 시신에는 대검이 찔려 있었다. 그날 양복천 할머니는 어린 딸과 함께 총상을 입었고, 아홉 살 난 아들(김문용)을 잃었다. 양 할머니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증언했다.

PMAG단장 로버츠 준장 공한철, 1948. 12. 14.

29) 『朝鮮日報』, 1948. 10. 20.

3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1997, 159~199쪽.

3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18~132쪽.

“새벽에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자 젊은이들은 황급히 피했습니다. 난 어린 아들과 딸 때문에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설마 아녀자와 어린아이까지 죽이겠느냐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집에 불을 붙이는 군인들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조건 ‘살려줍서, 살려줍서’하며 빌었습니다. 그 순간 총알이 내 옆구리를 뚫었습니다. 세 살 난 딸을 업은채 펄 쓰러지자 아홉 살 난 아들이 겁을 집어먹고 ‘어머니!’하며 내 품으로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아들을 향해 또 한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에 총을 맞아 심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가버리자 나는 우선 총맞은 아들이 불에 타지 않도록 마당으로 끌어낸 후 딸을 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울지 않았기 때문에 딸까지 총에 맞았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리려는데 담요가 너털너털 합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왼쪽 무릎을 부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생일날 불구자가 된 딸이 벌써 선세살입니다.”³²⁾

가장 참혹한 희생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되었다. 토벌군은 게릴라들의 피난처와 물자 공급원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100여 곳의 중산간마을을 모두 불태웠다. 또 80대 노인에서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했다. 이 작전이 전개되는 기간에 최소 1만 5천명에서 2만명에 이르는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죽여 없애는 이른바 삼진(三盡)작전은 한라산 기슭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예로부터 지켜 오던 중산간마을을 파괴하였다. 소개령 등에 의해 참화를 입은 가옥이 35,500채, 피해가축 46,000필에 이른다는 기록³³⁾은 무엇을 말합니까?

32) 梁福天(81·조천읍 와홀2리)의 증언 - 「4·3은 말한다」 ④, 395쪽.

33) 石宙明, 『濟州島隨筆』, 1968, 194쪽. - 석주명은 이 기록에 대해 1949년 제주도 지사가 발표한 피해상황이라고 언급.

IV. 왜 50년동안 덮혀져 왔는가

그런데 역대 정권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50년 가까이 금기시해왔다. '4·3은 공산폭동이니 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말문을 막아온 것이다. 4·3에 대한 역사의 왜곡은 군과 경찰측이 앞장서서 주도해왔다. 그들은 수십년동안 4·3논의를 통제해오면서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만 이 세상에 남기를 강요했다.

그러나 4·3역사를 기록한 군경자료는 의도적인 왜곡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흑백논리는 꺼리낌없이 엄청난 문제로 확대 재생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즉 '공산폭동이 기 때문에 북한이 사주한 것'이라는 비약된 등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폭거적인 규정은 유족들의 마음 속에 커다란 불안과 공포심리를 심어줬다. 많은 유족들은 무슨 연유로 자신의 부모들이 숨졌는지, 그리고 그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놓고 알려고 안한다. 많은 유족과 체험자들은 아직도 피해의 늪에 벗어나지 못한채, 말하기를 꺼려한다. 그들은 여전히 '말없는 다수'일 뿐이다.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는 정작 속으로만 곪아 가고 있을 뿐이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은 이 숨막히게 하는 '공산폭동'의 발설근원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조작된 근거들을 찾아냈다. 여기서는 몇가지 사례만 소개하겠다.

첫째, 4·3 발발 직후 '외부 공산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언을 처음 시작한 쪽은 무장대 측의 주 공격대상이 됐던 군정경찰이었다.³⁴⁾ 본토에서 파견됐던 응원경찰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 토벌 명분을

34) 사태직후 제주비상경비사령관으로 특파된 김정호(경무부 공안국장)은 48년 4월 28일 귀경,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도를 체포해다 문초해 보면 대개 백정들로, 좌익계열에서는 일부 잔학한 살인을 감행하기 위해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여다... 살해하는 도구로 쓰는 형편"(『東亞日報』, 1948. 4. 30.)이라고 터무니없는 낭설을 유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제주출신으로 사태 前 제주감

찾기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연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추상적인 예단과 추리를 앞세우고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공산폭동론에 두번째로 동조한 세력은 미군정이었다. 미군정은 4·3을 공산반란으로 몰고갔다. 단 군정장관도 1948년 5월 5일 제주시찰 직후 “제주도 외에서 온 공산분자들이 일부 청년을 오도하여 산에 가서 폭동을 일으켜 관리와 선거를 지지하는 자들을 위협 살해하고 있다”³⁵⁾며 외지인들의 선동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 것 같은 발언을 했다. 그런데 4·3 발발 당시 제주주둔 9연대장 김익렬 장군은 미군정의 공산반란론은 전략적인 이유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회고록³⁶⁾을 통해 “미국 본토로부터 제주도사태 발생에 대한 문책을 받은 미군정은 국제여론을 무마하고 사태를 조속히 진압하기 위해 전략상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의를 당시 제주주둔 경비대 책임자인 자신에게 직접 했었다”는 증언을 남겼다.

셋째, 1970년대 들어 개인저술로서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지령에 의해 4·3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박갑동이였다.³⁷⁾ 한때 남로당 지하총책

찰청장 역임)은 제주 현지시찰을 마치고 48년 5월 5일 경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동에 팔로군이 참가하였다는니 기관총을 가지고 있느니 하는 풍설이 있었으나 그것은 전연 낭설이고 폭도들은 주로 제주도민이고 그 수효는 약 300~400명으로 추측되고 있다”(『朝鮮日報』, 1948. 5. 6)고 밝혀 풍설로 떠돌던 외부 개입설을 부인했다.

35) 『서울신문』, 1948. 5. 7.

36) 김익렬 연대장은 초토화작전 감행을 거부하다가 단 장군에 의해 해임됐다. 나중에 한국전쟁에 참전, 중장까지 진급했던 그는 예편 이후 4·3의 진실을 밝히는 회고록(원고지 350매)을 집필했다. 김 장군은 이 회고록을 쓰게된 동기를 4·3의 기록들이 너무 왜곡되고 미군정과 경찰의 실책과 죄상이 은폐되는데 공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에 의해 공개된 이 회고록은 4·3 초기의 미군정의 토벌정책과 군·경의 대응전략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있다. - 김익렬,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②, 307~308쪽 참조.

37) 박갑동, 『박헌영』, 1983, 198쪽.

을 지냈다는 그의 경력 때문에 이 주장은 신빙성있게 받아 들여졌다. 보수계열의 연구자들은 이 대목을 인용, 중앙지령설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4·3 취재반의 검토 결과 그의 글에서 여러 곳의 오류를 발견했다. 도쿄에 사는 박갑동에게 서신을 띄웠지만 회답이 없었다. 취재반의 한 기자가 직접 도쿄로 날아갔다. 비로소 말문을 연 박갑동은 “중앙지령설은 내 글이 아니고 정보부에서 고쳐 쓴 글”³⁸⁾이라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다.

넷째, 교과서의 표기도 문제다. 몇해전까지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4·3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란작전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 필진들과 전화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4·3의 내용을 전혀 모른채 기존자료를 그냥 인용했다고 실토했다.³⁹⁾ 제민일보4·3취재반이 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국사편찬위원회는 1996년부터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북한과의 연계 표현은 삭제됐다. 그리고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 희생되었다’는 부분이 추가됐다.⁴⁰⁾ 그러나 교과서의 4·3관련 기술은 아직도 미흡하며 전면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4·3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4·3 발발과정에서의 남로당 중앙지령설은 부인되고 있다. 제주도당의 독자감행설이 유력하다. 이같은 견해에는 미국학자 존 메릴 박사나 브루스 커밍스 박사 등도 동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토벌대 측이나 관변자료에서는 계속 중앙지령설을 유포, 혼선을 빚게 해 온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불법집행으로 빚어진 참혹한 학살 실상을 덮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경자료는 비단 공산폭동 문제만이 아니라 1차 기초자료로서도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부실한 내용이 많다. 계엄령을 집행했던 군의 자료에 계엄령 선포 날짜가 틀리게 기록되는 등 기초적인 날짜나 인명 하나 조차 믿기 어렵다. 심지어 경찰자료⁴¹⁾에는 서두에 언급한 ‘북촌리 사건’, 즉 군인들에 의해 이틀새 4백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처참하게 총살된 사건을 ‘공비’들이 자행한 것처럼 버젓이 그 가해자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

38) 박갑동과의 인터뷰, 『제민일보』, 1990. 6. 28.

39) 『제민일보』, 1991. 4. 3.

40)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하), 1996, 197쪽.

41)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315쪽.

V.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미국은 과연 제주4·3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유혈사태에 그들은 책임이 없는가? 필자는 4·3취재반⁴²⁾이 편성되던 1980년대 말까지도 이 물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 있었다. 중산간마을과 해안마을을 누비며 4·3 체험자들로부터 증언채록을 하면서도 “미군을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을 빼놓지 않았다. 그때마다 촌로들은 “미군과 4·3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통명스럽게 대답해올 뿐이었다.

그러나 4·3의 취재범위가 넓고 깊어지면서 미군의 실체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고비마다 그들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을 정도로 깊숙이 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고구마덩굴 같은 것이었다. 헤치면 헤칠수록 그 속에는 미군이 도사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4·3취재반은 미군정 보고서, 즉 ‘G-2보고서’와 CIC기밀문서 등을 입수, 미군정과 제주4·3의 관계를 예의 분석해 왔다. 이런 문서들은 미군 지휘부가 얼마나 제주사태의 진행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느냐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대표적인 문건들이다. 미군은 다양한 정보망-여기에는 편지점열, 전화도청까지 포함된다-을 통해 제주도의 기관이나 민간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서 몇월 몇시에 무슨 사건이 일어 났는가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자료들은 바로 미군정이 제주지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해서 유혈사태를 적절히 막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는 ‘근거있는 사료들’이다.

42) 4·3취재반은 1988년 제주신문에서 결성됐다. 필자는 당시 이 신문 사회부장으로 취재반장을 맡았다. 1년의 준비 끝에 1989년 4월 3일 ‘4·3의 증언’이란 이름아래 4·3연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8개월만에 ‘제주신문 사태’를 맞아 취재반원들이 집단해고되었고 신문 연재도 중단되었다. 그리고 1990년 6월 2일 도민주로 제민일보가 창간되면서 연재는 다시 재개되었다. 그 성과물로 ‘4·3은 말한다’ 5권까지 한국어와 일본어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신문 연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7권까지 출간할 계획이다.

필자는 ‘오라리 방화사건’을 추적하면서 과연 미군의 정체가 뭐냐는 깊은 의문에 빠졌다. 오라리 사건은 1948년 5월 1일 제주읍 외곽마을인 오라리에 대낮에 일단의 청년들이 들어와 민가를 불태우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게릴라측 대표 김달삼과의 담판 3일만에 발생된 점, 그리고 모처럼 성사됐던 평화협상이 깨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문은 그 방화행위자들의 정체가 과연 누구였느냐는 점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당시 기록들을 검토해 보았더니, 경찰 쪽에서는 ‘폭도들의 소행’으로, 경비대 쪽에서는 ‘경찰이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을 시켜서 한 행위’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미군 자료들은 경찰 쪽 보고를 수용, 게릴라측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이 예민한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이 미군촬영반에 의해 입체적으로 촬영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미군 비행기에 의해 불타는 오라리가 공중에서 찍혔는가 하면, 지상에서는 오라리 마을로 진입하는 경찰기동대의 출동 모습이 동시에 촬영되었다. 이 무성기록영화 필름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놀라게도 ‘제주도의 메이데이(May Day on Cheju-do)’⁴³⁾이었다. 곧 불타는 오라리 현장이 4·3 기록영화의 주 무대가 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오라리 방화가 ‘폭도에 의해 자행된 것’처럼 조작 편집되었다는 점이다.

4·3취재반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층취재에 나섰다. 당시 방화 현장을 목격했던 마을 주민들을 만났다. 또 방화사건 직후 현장을 조사했던 9연대 정보주임 이윤락씨를 수소문 끝에 어렵게 부산에서 찾아냈다. 정보주임은 김달삼과의 협상 때도 동석했던 9연대의 핵심 장교였다. 이들은 한결 같이 방화사건은 우익단체원들의 소행이라고 증언했다.

취재반은 마을 주민들이 지목한 방화 혐의자를 추적했다. 90년대 초에 필자가 만난 그는 60대 후반의 건장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대동청년단 단원이었던 그는, 처음엔 방화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목격자들이 대질확인이라도 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비로소 방화사실을 시인했

43) 존 메릴, 앞의 논문, 169~170쪽.

다. 그리고 그는 그날 경찰트럭을 타고 서청과 대청 단원들이 오라리 마을에 함께 들어 갔음을 털어 놓았다.

방화 뒤의 그의 행적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방화사건 다음날 9연대 조사반에 의해 연행되어 감금되었다. 모슬포 군 영창에서 22일간을 보낸 그는, 새 연대장(박진경)의 손에 의해 한밤중에 풀려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제복을 입게 된다. '오라리 방화사건'의 방화범이 경찰 신분으로 변신, 4·3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맹렬하게 토벌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이다.

또 하나의 의문은 문제의 미군 촬영반과 미 군정장관 윌리엄 F. 딘 소장과의 관계이다. 기록영화 '제주도의 메이데이'에는 제주를 시찰하는 딘 장군의 모습이 나온다. 그때의 군정장관 위치는 지금의 '장관'의 지위가 아니라 군정통치를 총괄하는 '행정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그런 딘 장군의 제주방문은 유별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신문이나 김익렬의 유고에도 언급이 없었다.

4·3취재반은 이를 중시, 정밀조사를 벌인 끝에 딘 장군이 48년 4월 29일 극비리에 제주에 다녀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⁴⁾ 그날은 김익렬 연대장과 김달삼 간의 '4·28평화협상'이 벌어진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다. 그것은 김익렬 연대장의 회고록과 연결하면 엄청난 사실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김 연대장의 유고 가운데 딘 장군과 연관된 2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다. 하나는 48년 4월 말 소련이 UN무대에서 양쪽 진영의 점령지역 정책을 비교하면서 제주도 4·3 문제를 들먹이며 미군정의 실정을 질책하는 소리를 높였고, 이에 발끈한 워싱턴당국은 한국에 파견된 딘을 문책, 조속한 진압을 명령했다는 것과 미군정은 국제사회에서 소련의 선전공세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제주도 사태를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무장대와의 평화협상 등 선무활동에 치중하던 제주의 김익렬

44) 『서울신문』, 1948. 5. 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177~184쪽.

연대장에게 딘 군정장관 정치고문이라는 미국인이 나타나 제주도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진압되지 않으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한국의 독립에도 해를 끼친다면서 초토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김 연대장이 이를 거부하자 '10만 달러를 주겠다',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알선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회유책을 쓰다가 끝내 김 연대장의 의지를 꺾지 못하자 설득을 포기했다는 내용이다.⁴⁵⁾

이런 와중에서 김 연대장은 4월 28일 평화협상을 진행했고, 딘 장군은 그 다음날 제주를 극비방문했다. 그리고 오라리 방화사건이 터졌고, 딘 장군은 5월 5일 제주를 다시 방문, 김익렬 연대장을 해임조치했다. 그리고 딘 장군의 제주 시찰이후 미군정의 정책은 '화평'보다는 '토벌'위주로 급선회되었다.⁴⁶⁾

5월 1일 그날 오라리 현장을 조사했다는 이윤락 정보주임의 증언도 중요하다. 그는 평화협상을 꾀하기 위한 우익청년단원들의 소행임을 확인한 다음, 김익렬 연대장과 함께 미군 제주본부를 찾아갔다고 했다. 그런데 CIC장교(소령)는 이 보고를 묵살, '폭도들의 소행'이라고 몰아세운 뒤, 한 술 더 떠서 앞으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 토벌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이윤락씨는 필자에게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토벌만 강조, 5km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은 폭도니까 죽여야 한다는 미군장교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⁴⁷⁾ 결국 이 명령을 거부한 정보주임 이윤락 중위도 군복을 벗어야 했다.

그런데 미군장교가 구상한, 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지대를 적지로 간주, 부락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사살하는 이른바 초토화작전은 그 뒤 5개월 만인 1948년 10월부터 실제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 작전은 당시 9연대장이었던 송요찬 소령의 지휘로 감행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언⁴⁸⁾이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를 불바다로 만들고,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9

45) 김익렬,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②, 307~314쪽.

4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②, 183~184쪽.

47)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167~168쪽.

48) 金浩謙(82·서울시 은평구·서귀포경찰서장 역임)의 증언.

연대의 초토화작전을 미군 정보보고서에서는 ‘성공한 작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 보고서는 9연대의 작전이 성공한 요인으로 네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다음에 올 2연대에 비해 좋은 전과와 업적을 올리려는 욕망”⁴⁹⁾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제주도작전에서의 미군의 관점은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반공전선 구축’ 일 뿐이다. 평소에 그들이 주창하는 자유나 평등, 인권 등의 단어는 차라리 사치스럽다. 특히 미군 정보보고서를 분석하다보면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고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949년 2월 20일 제주읍 도두리 근처에서 76명의 게릴라 혐의자들이 민보단의 축창에 찢려 죽는 처형장면이 우연히 미군사고문단(KMAG) 일행 4명에 목격되었다. 그 처형작전은 군인과 경찰이 감독하고 있었다. 고문단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미 절반인 38명이 숨진 뒤였다. 그리고 고문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머지 38명이 처형되었다. 미군 보고서는 “사망자 가운데는 여자 5명과 중학생 나이의 수많은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었다”⁵⁰⁾고 기록하면서도 이를 만류했다는 흔적은 없었다.

그들의 정보보고서에는 곧잘 ‘재판도 없이 즉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래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시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미군 무기와 군복, 장비를 지원하면서 ‘토벌’을 독려했을 뿐이다. 심지어 제주도민들에게는 악몽같은 존재인 서청이 제주에서 경찰과 경비대를 지원하게 된 것은 “몇몇 미군장교들의 추천에 의한 것”⁵¹⁾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미군은 제주사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필자는 미국의 4·3학자 존 매릴 박사⁵²⁾와 세차례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49) 미 24군단, 「G-2 일일보고서」, 1948. 12. 17.

50) 주한미군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9. 3. 3.

51) 미 24군단, 「G-2 일일보고서」, 1948. 10. 1.

52) 그는 1975년 하버드대학에서 4·3을 주제로 한 논문 「제주도반란」(The Cheju-do Rebellion)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4·3’이란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때, 미국땅에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서에 소장된 주한 미군의 자료를 중심으로 4·3 역사를 쓴 것이었다. 필자는 두 번은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92년 6월에는 1시간 40분동안 위성중계 토론대담을 가진 바 있다. 그는 미 국무성 정

그는 인터뷰에서 “4·3 발발 때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은 없었다”고 밝혀 필자와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유혈사태에 대한 미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즉 존 메릴 박사는 “미군정이 유혈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잔인한 진압으로 빚어진 유혈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초토화작전이 미군 CIC 장교에 의해 구상됐던 점, 그리고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1949년 6월말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현대사 연구에 저명한 미국학자인 브루스 커밍스 박사가 최근에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브루스 커밍스 박사는 1998년 3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강연과 4·3취재반과의 인터뷰⁵³⁾에서 “한·미 간의 비밀협약에 따라 미군은 1949년 6월까지 한국의 군대와 경찰을 지휘·통제했다”면서 “따라서 49년 6월 말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제주섬에서 발생한 모든 학살극과 잔혹행위에 대해 미국은 단지 윤리적 책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VI. 논의의 핵심

1. 발발 원인

4·3의 발발원인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존 메릴의 논문 「제주도반란」은

보조사국 대외문제분석관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 필자가 “4·3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그는 “4·3을 연구한 학자로서 인터뷰하는 것이지, 정부 관료 입장이 아니다”고 자신의 입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53) 강연은 ‘4·3은 말한다 제4권 일본어판 출판 기념’으로 행해졌고, 인터뷰는 4·3취재반 金鍾冕기자와 이뤄졌다. - 『제민일보』, 1998. 3. 19.

“전후 점령군에 대하여 제주도에서와 같은 격렬한 대중적 저항이 분출된 일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⁵⁴⁾는 표현으로 그 특수성을 함축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살핀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관변자료들은 4·3의 원인을 ‘공산계열의 시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 더 이상의 논의를 제한해 왔다. 그러면 단지 남로당의 선동에 의해서 ‘격렬한 대중적 저항이 분출됐다’는 식인데, 이런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개입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좌파세력의 개입 범위와 무장봉기의 무모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군정의 실정(失政), 관공리의 부패와 응원경찰의 가혹행위, 그리고 서청의 과오 등도 함께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1947년에 벌어진 ‘3·1절 발포사건’과 이에 항거한 ‘총파업 사건’을 군정당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지 물리력을 대거 유입,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편데 대해서도 비중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다음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군정당국은 응원경찰대의 무차별 발포로 빚어진 ‘3·1절 발포사건’이 과잉대응이란 중후⁵⁵⁾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도 발포책임자 문책이나 사과 등 민심수습책을 쓰기보다는 정당방위라고 강변을 하면서 민심수습을 의면한 점이다.

둘째, 경무부 수뇌부는 총파업 이후 제주도를 ‘붉은섬’으로 규정하는 발언⁵⁶⁾ 등을 통해 응원경찰과 서청 단원들을 자극시켰는데, 그런 표현이 과연

54) 존 매릴, 앞의 논문, 196쪽.

55) 발포현장인 관덕정 앞에 시위대는 이미 통과한 뒤라 200명 미만의 관람 군중만 남아 있었던 점, 그런 가운데 기마경관이 어린이를 친 사건이 발생, 일부 군중들이 기마경관을 뒤쫓으며 투석을 하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는 사실, 사망자 가운데는 초등학생과 젖먹이를 안은 여인이 포함돼 있었고 거위가 등 뒤쪽에 총탄을 맞았다는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 『4·3은 말한다』 ②, 276~278쪽.

56) 경무부장 조병옥은 제주시찰을 마친 뒤 1947년 3월 20일 군정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제주도사건(3·1사건과 총파업)은 북조선의 세력과 통모하고 미군정

검증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4·3 이전에 이미 2,500명이 검속되는 등 유치장은 차고 넘쳤는데, 이런 검거선풍은 정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넷째, 1948년 3월 연달아 발생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은 제주사회를 극도로 자극시켰는데, 이런 민심의 이반은 4·3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다섯째, 1947년까지도 좌(左)도 좋고, 우(右)도 좋다는 식으로 끌고간 미군정의 이념 혼선⁵⁷⁾이 일반대중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줬는지도 함께 연구해야 할 점이다.

4·3의 원인을 제대로 보려면 이런 민심의 흐름을 그 시대의 잣대로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이분법에 의한 도식적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4·3발발 당시 제주도를 시찰했던 판사·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좌익세력의 개입 못지않게 관공리의 부패와 경찰의 가혹행위, 서청의 만행 등을 함께 지적했던 사실⁵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죽했으면 미군정 검찰총장 이인(李仁)마저 “시정방침에 신축성이 없었

을 전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유치하려는 일부 책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표현을 한다. - 『독립신보』, 1947. 3. 21.

경무부 차장 최경진은 “제주도민 90%가 좌익색채를 띠고 있다”는 발언도 한다. - 『한성일보』, 1947. 3. 13.

이런 표현은 드디어 “서청 제주도단장이 제주CIC에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비약된다. - 미24군단, 「G-2 일일보고서」, 1947. 11. 25.

57) 1947년 7월 제주도군정장관 베로스 중령은 “좌·우익의 정당을 물론하고 그 관계자가 관공리 직원으로 취직할 수가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 『제주신보』, 1947. 7. 30.

제주 9연대장 장창국 소령은 모병 광고문을 통해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려는 피끓는 젊은이들의 애국군사기관이다”고 천명했다. - 『제주신보』, 1947. 4. 22.

58) 『朝鮮日報』, 1948. 5. 23.

『朝鮮日報』, 1948. 6. 17.

『서울신문』, 1948. 6. 16.

고 관공리들이 부패한 것이 제주도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계열에서 바늘로 터뜨린 것이 제주도사태의 진상”⁵⁹⁾이라고 규정했겠는가.

아울러 ‘반쪽 조국은 안된다’고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정치적인 슬로건도 이런 탄압구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불법 학살극

4·3의 인명피해가 엄청나다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 적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제주도 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가운데 83%가 토벌대에 의해, 11%가 무장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⁶⁰⁾ 한눈에 진압작전 수행이 과도하게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토벌 대상’이 됐던 무장대는 과연 몇명이나 될까. 초기의 군경 자료에 언급된 당시 무장대의 동원 규모를 보면 대체로 ‘주력 500명 미만, 동조 가담자 1,000명 안팎’⁶¹⁾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4·3의 진행과정에서 수만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됐다. 이 유형의 비극을 면밀히 분석하면 무장 게릴라 측에도 책임이 있었지만, 군경 토벌대의 작전지시와 그 집행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진압군이 초도화작전을 감행하기 이전인 1948년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인명피해는 1,000명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⁶²⁾ 그러나 10월 이후 진압군에

59) 『서울신문』, 1948. 6. 17.

60) 신고된 희생자 가운데는 10세 미만 어린이 657명, 60세 이상 노인 675명도 포함돼 있다.

61) 육군본부, 『공비토벌사』(1954), ‘무장폭도 500명, 지방폭도 1,000명’

김대봉(경무부 공보실장), 『朝鮮日報』, 1948. 5. 6. ‘300~400명’

김익렬(9연대장), 『4·3의 진실』, ‘300명’

62) 경무부가 발표한 1948년 4월 3일~4월 25일까지 제주지역의 사망자는 83명이었

의해 초도화작전이 전개되면서 제주섬은 그야말로 ‘피로 물든 섬’이 되고 말았다. 인명피해를 다소 축소할 인상을 주고 있는 미군 정보보고서에도 “1949년 3월 현재 사망자 숫자는 15,000명으로 추정된다”⁶³⁾고 밝혀 10월 이후 인명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외의 중산간지대는 ‘적지(敵地)’로 간주하라는 작전명령에 따라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태웠다.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을 학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해안마을에서도 가족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낙인 찍어 그 부모 형제를 대신 처형하는 ‘대살’만행을 저질렀다. 재판도 거치지 않은채,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것이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은 97년에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이 초도화작전의 법적 토대가 됐던 한 문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1948년 11월 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문서⁶⁴⁾였다. 4·3체험자들에게 계엄령은 초법적인 조치로 각인되어 있었다.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조차도 “그때는 계엄령시절이라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계엄령을 ‘마구 사람을 죽여도 되는 제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잔혹한’ 계엄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서명 아래 발동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의 계엄령은 분석 결과, 계엄법이 제정(1949년 11월 24일)되기 1년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선포된 것으로 밝혀져 ‘불법 계엄령’⁶⁵⁾이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학계의 이런 불법성 주장과는 달리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1998년 7월 “4·3계엄은 일용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⁶⁶⁾고 판시, 앞으로 위헌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다. 이때는 무장대가 공세의 주도권을 잡던 시기인데도 사망자 유형은 ‘경찰관 7명, 양민 27명, 관공리 2명, 폭도 47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1948. 5. 3.
63) 주한미군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9. 4. 1.
6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④, 372~373쪽
65) 제민일보 4·3취재반, 『왜 4·3계엄령은 불법인가』, 『4·3은 말한다』 ⑤, 1998. 36 5~392쪽.

김순태, 『제주4·3당시 계엄의 불법성』, 98년 4·3 50주년 학술 심포지엄서 발표.
김창록,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98년 헌법 심포지엄서 발표.

설사 계엄령이 적법이었다고 해도, 해서는 안되는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즉결 학살을 정부군 차원에서 자행됐다는 점에서 문제 해법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즉 이 계엄령은 제헌헌법의 법통을 이어받은 한국정부라면 그 어떤 정부든 4·3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잔혹한 진압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란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감행됐기 때문이다.

VII. 조국통일운동의 하나로 평가해야

한국의 역대정권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냉전이테올로기를 앞세워 논의조차 못하게 했다. 특히 30년 가까이 장기집권한 군사정권은 이 사건을 소재로 문학활동을 한 문인들까지도 구금했다.

그러나 1987년 한국땅에 민주화바람이 불면서 제주 4·3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1989년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기획연재와 제주4·3연구소의 발족은 4·3진상규명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이는 그간의 논의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수준이던 것에 반해 직접조사활동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93년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치돼 피해자 신고작업을 시작한 것이나, 1997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주4·3 범국민위원회'가 발족한 것도 진상규명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50주년을 맞는 98년 8월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박사(동티모르 독립운동가)를 비롯, 한국과 대만, 일본본토, 그리고 오키나와의 학자 법조인 언론인 등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4·3이 국제문제로 부각되었다.

4·3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유족이나 체험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한으로 맺혀 있다. 이 잘못된 역사에 대한 복원 없이 앞으로 나

66) 이 재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제기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4·3계엄령의 법적 근거로 1913년 9월 23일 일제가 공포한 '조선에 시행할 법률'속에 포함됐던 계엄령을 들었다.

아간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다. 4·3은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1998년은 4·3이 발발한지 꼭 50년이 되는 해다. 이 의미있는 해에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4·3문제의 해결을 공약했다. 그것은 진실규명, 명예회복, 적절한 보상으로 요약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회의는 98년 4월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주와 서울 국회에서 4·3공청회⁶⁷⁾를 개최하는 등 진상규명 작업에 나섰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사적 사실 자체의 발굴과 규명이다.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복원을 위해서도, 억울한 죽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 일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몇가지 전체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제주도민끼리 갈등구도로 가서는 안된다. 4·3을 구조적인 전체 맥락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데올로기적 시각에 치우쳐 해석하려 한다면, 이념문제를 둘러싸고 도민끼리 싸움을 했다는 단순논리에 함몰한 위험이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희생자였다'는 인식과 포용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비록 과거 정권의 과오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신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잘못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중 정부가 지난 정권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해온 사례는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셋째, 국회는 조속히 '제주 4·3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규명작업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적절한 보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의 4·3특위의 활동이 기대된다.

67) 필자는 5월 7일 제주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자로, 9월 28일 국회공청회에서는 지정토론자로 나서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국가폭력이 빚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먼저 정부 최고통치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미군정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초토화작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양민희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미국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 의미로는 단선단정에 반대한 상징적 사건인 제주4·3이 조국통일운동의 하나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제주 4·3의 진상규명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빛과 어둠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중요사건의 하나로 제주4·3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4·3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 중앙정부의 민주화와 정보 공개의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⁶⁸⁾라고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그동안 역대 정권이 비껴간 4·3문제를 당당하게 치유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요, 책무일 수밖에 없다.

68) 木村晃三(요미우리신문 편집위원), 『20世紀의 드라마- 現代史再訪』②, 東京, 1992, 349쪽.

A Historical Review of April Third Movement in Cheju

Yang, Jo-Hoon
Managing Director, The Cherin Il-Bo (Daily News)

In 1948, Cheju Island was engulfed in a whirl of rage.

US military forced to poll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Cheju citizens viewed the election as a means of solidifying the sepa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insisted on the unification of Korea.

This Uprisings resulted in the deaths of 30,000 people that meant 1 of 9 people killed on Cheju Island which had kept 270,000 residents at that time.

This document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s which brought this atrocity, the process of extermination, the responsibilities of U.S.A involved with this case and how Korean Government enforced it's rule not to reveal this events to the public for 50 years.